

북한의 민족공조의 실제

박 승 식*

- | | |
|---------------|-----------------|
| I. 서론 | IV.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 |
| II. 남한의 민족공조 | V. 민족공조의 평가 |
| III. 북한의 민족공조 | VI. 결론 |

Abstract

The Substance of North Korea's 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cooperation means th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m reciproc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as of one nation, therefore, it is a very ideal phenomenon to establish peace system and further realize unification by enhancing South-North relationship. However, contrary to its superficial meaning, North Korea's national cooperation is united front tactics for revolution against the South, aggravates conflicts within the South, advocates anti-U.S. movement and the withdrawal of the U.S. armed forces, is a method to reinforce and idolize Kim Jeong-Il regime, and an attempt to overcome its own risk of the regime both at home and abroad.

With regard to North Korea's national cooperation, our government should accept criticism of its policy about the North. Also the government should press the North to implement particulars already agreed in Inter-Korean Basic Agreement,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the 4th six-way dialogue, etc.

It is necessary to make the North realize that the South's support toward the North and collaboration can be improved only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pursue the actual cooperation. Also it is required to maintain U.S.-Korean cooperation so that reinforces the U.S.-Korean alliance and establishes new security strategy.

Key Words: national cooperation, united front tactics, racial characteristics, risk of regime, U.S.-Korean cooperation

*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초빙교수

I. 서론

북한은 과거에 군사나 핵문제 등 주요 외교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태도를 유지하여 왔는데, 2000년 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한 후부터 민족공조나 ‘우리 민족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족공조는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지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는 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공조는 외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내면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본래 북한은 공식적인 표현과 달리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고, 남한이나 대외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상황이나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파기하거나 무효화하여 왔다. 그리하여 북한의 권력구조 형성과 유지를 연구할 때에는 북한의 역사적·정치문화적 유산과 전통적 요소, 북한정권이 수립·지속되어 온 특수한 상황적 여건들을 고려해야 한다.¹

북한의 민족공조는 기존의 대남전략의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선택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민족공조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 왔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민족공조, 북한의 민족 개념, 북한의 민족공조의 전개와 전략 등을 고찰하고, 민족공조의 성과와 대응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남한의 민족공조

남한에서 민족공조는 1996년 7월 26일 정전협정 체결 43주년을 맞아 김승훈 신부,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06명이 발표한 민족평화선언문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 선언문에서 “냉전체제가 해체됐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정치, 군사적 긴장과 불안이 감돌고 있다”고 하면서, 한·미·일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은 헛된 구호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체제 대립의 논리와 정서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²

¹ 이은숙,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p. 48.

² <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0419960726031001353+19960726+1353>.

남한의 진보단체들이 민족공조를 주장한 것은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일본 등이 압박하는 상태에서는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립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시한 것이다. 대립적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주변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민족공조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상당히 반영되었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하면서, 1991년 12월 13일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과 불가침만 실천하면 남북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3원칙으로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둘째,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으며,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실천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다.³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한간의 민족공조와 주변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⁴ 그리고 남북공동선언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는 당사자간에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⁵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완·발전시킨 평화변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변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 추구로 설정하고,

³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이라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포용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 하였다. 우리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북정책은 대결과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불개입정책(무관심정책), 포용정책 등 3개 대안이 있는데 포용정책이 최선의 대안이라 하였다. 통일부,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 <www.unikorea.go.kr>.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포용정책이라 하였고, 2001년부터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라 하였다.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1998~2003).

⁴ 류길재,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북관계: ‘민족공조’ 전략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일성 사후 10년, 김정일체제 평가』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지역협의회, 2004), p. 35.

⁵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21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 나가야 하는 민족사적 소명이라 하였다. 통일부, 『2001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1), pp. 19~20.

추진 원칙으로 (1)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2) 상호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 협력, (4)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⁶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한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를 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등의 원칙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정상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안보에 중점을 두어 진보적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남한에서 처음 민족공조를 주창한 것도 정부의 대북 강경과 압박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북정책은 민족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포용하여 보수적 집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Ⅲ. 북한의 민족공조

1. 북한의 민족개념

북한에서 민족은 다양하게 설명하고 정치목적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북한은 초기에는 민족을 스탈린(Joseph V. Stalin)이 제시한 “언어의 공통성, 영토의 공통성, 경제생활의 공통성에 문화의 공통성을 가진 심리적 성격의 공통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공동체”라 하였고, 이러한 특징들 중 하나만 부족해도 민족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지도이념이 되면서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비판하고 수정한다. 북한은 초기에 받아들인 민족 개념은 민족해방투쟁에 진입하지 못한 나라나 자본주의적 발전을 실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계급적 억압은 청산하였지만, 조국통일이라는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민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스탈린이 제시한 민족 개념은 민족에 대한 이해와 민족의 단합에 저해를 주고, 민족성과 주체성을 고수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한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에 민족을 “핏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

⁶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p. 6~11.

⁷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p. 128~129.

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운명 공동체”⁸라 정의하고 있다. 스탈린이 정의한 민족 개념에서 핏줄의 공통성과 역사적 사회생활단위를 추가하였으며, 경제적 공통성을 제외하고, 인간의 공동체를 운명공동체로 바꾸었다. 그리고 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 공동체”⁹라고 하여, 나라와 민족을 동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민족은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다른 집단보다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공고한 사회적 집단으로, 일시적 결합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 데 본질이 있다고 한다. 민족 내에는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며,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지만, 민족은 영원하다고 한다.

근래에 북한은 민족은 “핏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이 기본징표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¹⁰라 하였다. 핏줄의 공통성은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지만, 씨족·종족들의 핏줄의 공통성과 구별된다고 한다. 씨족·종족들의 공통성은 가족, 친척의 범위에서 혈연적 관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족에서 핏줄의 공통성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도 있고, 혈통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핏줄의 공통성을 이룬 민족도 있다고 한다.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데, 민족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핏줄이 같아도 언어가 다르면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공고한 집단으로 결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핏줄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지역의 공통성은 민족적 영토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을 하나의 생활단위로 결합시키는 주요한 조건으로서, 핏줄, 언어,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이루게 하는 자연적 조건이라 한다. 민족은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민족과 구분할 수 있고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의 공통성이 민족을 규정짓는 절대적인 징표는 아니라 한다. 지역적 공통성을 절대화하면 이국에 사는 동포들은 같은 민족이 될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생활의 공통성은 고유한 민족정신, 민족성을 표현하며 민족자주의식을 높이

⁸ 『조선말 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229.

⁹ 리용선, “민족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자,” <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Gisa/index.htm>.

¹⁰ 김화·고봉, 『21세기태양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402; 『조선대백과사전(1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 68.

는 데 커다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족의 징표라 한다. 문화는 문학예술, 생활방식, 풍습, 도덕 등을 포괄하는데, 민족문화는 민족을 독자적인 민족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정신적, 물질적 토대라 한다.

김정일은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징표를 고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와 한 핏줄을 이어받고 고유한 우리말을 쓰며 조선의 미 풍양속을 존중하고 조선 사람의 넋을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 민족이라 한다. 즉 민족 개념을 주체사상과 연계하여 민족주체성을 강조한다. 민족주체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족의 성질”이라 하고, 민족이 주체성을 잃으면 민족적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의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가장 공고한 생활단위이며 자주적 운명의 공동체라 한다. 김정일은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도 하였는데, 혁명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이며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고 한다.¹¹ 북한은 민족국가는 “민족을 단위로 하여 형성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민족국가”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고 하였다.¹²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산주의의 세계혁명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에서도 혁명의 주인, 민족의 운명 개척의 주인은 인민자신이며, 혁명과 건설도 자기의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요구와 민족적 특성,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성은 기질과 성격, 심리와 정서, 세태풍속과 언어 등으로 표현되는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라 하면서,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 한다. 1995년 1월 9일 『평양방송』은 “오늘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다”라 하였고, 1996년 7월 8일 김일성 2주기에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정론에서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 사는 김일성, 김정일 민족…;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무궁하리라”고 하였다.

김일성 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라 하였다.¹³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수령과 똑같은 김정일을 또 다른 수령으로 모

¹¹ 오수경,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 『로동신문』, 2004년 9월 30일.

¹² 『조선말 대사전(1)』, p. 1230.

¹³ 김현웅,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시는 김정일장군』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97.

시고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김일성 민족이라 한 것은 남한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 민족에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자기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곧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김일성 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자기 수령에게 충실성을 다 바쳐 수령과 영원한 혼연일체를 이룸으로써 명실공히 김일성 민족으로 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휘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¹⁴

북한에서 중요한 민족 개념의 하나가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제시하였고, 김정일이 198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행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연설에서 재강조하였으며, 1990년대에 대대적으로 주민들에게 교양하고 있다.¹⁵ 김정일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 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높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라 한다.¹⁶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민족은 북한 인민, 즉 주체형의 사회주의 민족에만 한정된 것으로 정치적 선전의 수단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북한 공동체의 대내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지, 남북한이 통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은 희박하다.¹⁷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민족자주의 사회주의”로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라 한다.¹⁸ 김일성에 의해 세워진 민족자주의 사회주의는 김정일에 의해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향후 7천만 겨레가 김정일 영도아래 자주적이고 통일된 강성대국을 이룩할 것이라 하였다. 민족자주의 사회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민족공조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반미자주화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것이고, 김

¹⁴ 위의 책, pp. 98~99.

¹⁵ 북한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교화하여 북한이 소련, 동유럽, 중국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선전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붕괴 및 자유주의적 경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 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p. 408.

¹⁶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 2.

¹⁷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2), p. 199.

¹⁸ 『평양방송』, 2004년 8월 9일.

정일의 절대성을 선전하려는 것이다.¹⁹

김정일은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가 될 수는 없고, 공산주의자들은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라 하여 민족주의를 부정하였다.²⁰ 김정일이 민족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족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은 주체사상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의 논리적 실천적 정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²¹

2. 민족공조의 전개

북한은 민족공조를 주장하기 전부터 민족대단결을 제창하여 왔다. 민족대단결은 김일성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원칙으로 합의한 자주,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후 북한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한 자주적 해결,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 하여 계속 주장해 왔다.²² 북한은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1993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개 강령’ 등에서도 민족대단결을 강조하였다. 민족대단결은 1990년대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 내용으로서 대남정책의 중요한 준거가 되어 왔다.²³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단결하는 것”²⁴이라 한다. 그리고 김정일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서한에서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1) 민족자주의 원칙 유지, (2)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하며, (3) 남북관계의 개선, (4)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 세력을 반대해 투쟁하며, (5) 전 민족의 접촉과 대화, 연대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⁵ 북한은 민족대단결에 의한 반미와 민족 자

¹⁹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706호(2004. 8. 6~2004. 8. 12), p. 20.

²⁰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4권 2호(2001), p. 239.

²¹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 195.

²² 김정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 14일.

²³ 김태일·전상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정세분석』 93-04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 8.

²⁴ 『조선말 대사전(1)』, p. 1230.

주적 통일을 실현하자는 주장을 신년공동사설과 언론에서 반복하여 주장하였다.

이런 북한이 2001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이다.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동족과 공조’라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민족공조로 전개된다. 2001년 1월 4일의 『로동신문』에서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 발표이후에 이룩되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민족공조가 제일이며 민족공조에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었다”고 하면서 공식화된다.

북한은 2001년 1월 10일 평양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대회”를 열고 5가지의 대남제의 가운데 첫 번째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하였다. 2001년 1월 19일 『조선중앙방송』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제목의 방송에서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린다는 것은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권능과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념과 제도는 달라도 동족은 동족이고 이념과 제도는 같아도 외세는 어디까지나 외세라 하였다.²⁶ 통일은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통일문제에 있어 외세와 공조하는 것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이라 하였다.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북남사이애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와의 공조를 그만두고 동족과 공조하는 데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200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모든 것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조국통일운동의 성패는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어떻게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통일로로의 지름길이다.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역사도 하나인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조는 당연한 리치이며 생존방식이다”라 하였다. 특히 북한은 2003년부터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남선전의 기사와 논평을 하고 있다.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지난해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조국통일

²⁵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 pp. 266~267.

²⁶ 『조선중앙방송』, 2001년 1월 19일.

운동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해였다.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사대매국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 속에서도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그 어느 외세도 우리 민족을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고 반미자주, 민족공조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이 확증한 첩리이다”라 하였다.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 전민족적 이념으로 되고 불신과 대결로 얼룩졌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주장하여 민족공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생명선이라 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을 고립 약화시키며 반전평화를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하며, 통일애국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 조선민족은 강력한 반전평화투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연대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민족공조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민족구성원들 모두가 마음과 뜻,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치고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라 한다. 민족공조는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민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자체의 힘과 지혜를 합치고 행동을 같이 해나가는 단결과 협력의 원칙이라 한다. 민족공조의 방식은 온 민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에 공동 대응하는 것과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라 한다.²⁷

IV.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

1. 새로운 대남전략

분단 이후 북한은 대남혁명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계속 추구하여 왔다. 북한은 분단 이후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기초하여 남조선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 의해 대남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전 조선 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²⁷ 송승환, 『우리 민족제일주의와 조국통일』, p. 117.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미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²⁸ 그리하여 북한의 남조선 혁명론은 남한에서 혁명 승리 후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단계적 통일전략이다.²⁹

김일성은 “연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한다”³⁰고 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새로운 전술로 민족공조나 ‘우리 민족끼리’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통일원칙으로 주장해 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등을 민족공조나 ‘우리 민족끼리’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통일을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동족과 공조하여 민족적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면서, 남한에서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이며 반통일적인 외세와의 공조, 친미공조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남한이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을 해치려는 외세에 합세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 한다.³¹

2. 남한의 갈등 조장

북한은 전통적인 공산주의 전술의 하나로 민족공조를 내세워, 남한의 갈등을 유도하고 친북 동조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여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은 구소련이나 중국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으로 공산화 혁명의 추진이 어려울 때, 전술적으로 계급을 초월하여 민족주의나 민족단결을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³²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 등의 대내적 위기, 핵개발과 인권문제 등에 대하여 미국의 부시 정부가 대북압박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구소련과 중국의 민족단결과 민족적 연합을 모방한 것이다.

²⁸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p. 36~46.

²⁹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p. 379.

³⁰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355~356.

³¹ 전중호, “친미 <공조>는 반통일대결과 북침전쟁의 길,” 『로동신문』, 2004년 10월 31일.

³² 스탈린은 국제공산주의 혁명 투쟁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련사회주의를 완성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슬라브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대러시아민족주의’를 주장하였고,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모택동 등 공산주의자들은 이념이 다른 국민당과 2차에 걸친 국공합작을 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화 혁명이 프롤레타리아의 힘만으로 실현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계급을 초월한 민족적 단결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제기되면서, 민족공조를 내세워 대남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유린과 반민주, 반민족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은 군부독재세력의 잔당이고 친미반동보수세력들은 반통일적이며 반민주적이라 비난하고 있다.³³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북한에 대해 불신적 태도를 보이는 한나라당은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집단으로 파멸시키자고 선전하고 있다.³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하려는 것도 국가보안법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성격과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고 있는 제2의 보안법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한다.³⁵ 북한은 남한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과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사업이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에 의하여 정부전복기도, 내란음모, 반국가단체행위로 탄압받아 왔는데, 이를 유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다.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지난해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의 반민족적, 반시대적, 반통일적 행위로 말미암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침체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힘 있게 전개된 자주통일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하여 남한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3. 반미운동과 주한미군 철수 전략

북한은 남한에서의 반미운동을 조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데에도 민족공조를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식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이며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상, 극도로 부패 타락한 퇴폐적인 생활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방식”이라고 하고,³⁶ 미국식 생활양식은 부르주아 생활양식의 표본이라 비판하고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한의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할 목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며 민족의 자주적 통일독립과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방해하는 침략정책을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³³ 윤창조, “《보안법》 폐지: 6·15시대의 시금석,” <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Gisa/index.htm>.

³⁴ 리경범, “북남대결을 몰아오는 《한나라당》을 파멸시키자,” <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Gisa/index.htm>.

³⁵ 최장일, “《형법보완》은 제2의 《보안법》 조작책동이다,” <www.uriminzokkiri.com/Newspaper/Urikkiri/index.htm>.

³⁶ 『조선말 대사전(1)』, p. 1213.

북한은 민족공조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로 설정하고, 남한에서 반미운동 조장, 한미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남한에서 전개되는 반미운동은 미국이 강요한 치욕을 청산하려는 것으로 애국열의의 분출이며 시대의 흐름이라 선전하고 있다. 반미운동을 반대하는 것은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으로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 독소라 하면서,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부추기고 있다.³⁷ 북한은 남한의 친미공조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분열공조라 하고,³⁸ 민족공조가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평화공조, 애국공조라면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공조, 매국공조라고 선동한다.³⁹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근원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압살정책에 있고, 미국은 최근 남한에서 미군철수요구가 증가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가 활발해지는 것을 억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⁴⁰ 북한은 “미제 호전광들이 북침 핵전쟁계획들을 견어치워야 하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국제사회 앞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 하였다.⁴¹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북한은 미국을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며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공동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60년간에 걸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은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으로 되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하여 한반도에는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감돌고 있으며, 미제의 핵무기는 북과 남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미제의 범죄적인 새 전쟁도발책동, 민족멸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미군의 남한주둔(1945. 9. 8) 60년을 맞아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 명의의 ‘공동호소문’에서 그 동안의 미군 범죄를 비난하면서 미군 철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 연대를 강조하였다.⁴² 그리고 미군의 ‘남한 강점’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집회를 2005년 9월 7일 서면호

³⁷ 림룡철, “미국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 『로동신문』, 2004년 10월 30일.

³⁸ 전중호, “친미 <공조>는 반통일대결과 북침전쟁의 길,” 『로동신문』, 2004년 10월 31일.

³⁹ 호영길,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 『로동신문』, 2004년 9월 29일; 리석철, “민족공조의 길에 참다운 애국애족이 있다,” 『로동신문』, 2004년 10월 5일.

⁴⁰ 백문규, “미제는 평화와 안정의 악랄한 파괴자,” 『로동신문』, 2004년 10월 30일.

⁴¹ 『평양방송』, 2004년 11월 13일.

⁴² 『평양방송』, 2005년 9월 7일.

격침비 앞에서 개최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해 미군 철수를 계속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이 6·25전쟁에서 민간인 학살만행을 하였고 동두천 여인 사망사건과 여중생을 죽이는 온갖 범죄행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의 남한 강점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에게 북과 남이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 민족은 동족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대결하거나 6·25와 같은 재난도 겪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현재도 미군은 주인행세를 하며 침략과 간섭, 분열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으며 남북 화해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3. 김정일 체제의 강화와 이상화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민족공조를 주장하지만, ‘우리식 사회주의’와 강성대국을 제창하고 선군정치를 통해 김정일의 권력체제를 강화하고 대남혁명전략을 유지하는 이중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의 선군영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이 나갈 것”이라 하고, 선군혁명의 주력군인 군대를 계속 강화 발전시켜야 하며, 당의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선군경제 노선에 따라 국방공업을 우선시하며, ‘혁명적 군인문화’를 온 사회에 확산시켜 문화영역에서도 강성대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³ 북한은 2005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현 시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통일운동을 전진시키는 근본담보는 선군정치에 있다면서 “선군은 자주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군을 통해 대남혁명을 실현하려는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면서 ‘당중앙’, ‘위대한 영도자’, ‘인민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졌고, 김일성 사후에는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 등으로 장군 칭호가 많았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김일성·김정일과 관련한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다른 교과서에도 이들을 이상화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는 책자와 문학작품을 발간하고, 노래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김정일의 출생 및 성장과 관계가 있는 여러 지역을 ‘혁명사적지’로 조성하여 왔다.⁴⁴ 최근에는 세계 5대륙 160여 나라에서 김정일에 대한 호칭만 1,200여 개에 달한다고 하면서 품성과 자질, 선군영도, 신화와 태양 등

⁴³ 『로동신문』, 2004년 12월 20일 사설.

⁴⁴ 김정일의 이상화에 관한 내용은 통일부,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4), pp. 89~90.

으로 분류하여 선전하고 있다.⁴⁵ 심지어 남한의 대학교수도 김정일을 “희세의 정치 거장이시며 애국애족의 화신”이라 하고, 부산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애국 애족의 뜻이 어린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따를 때 겨레의 통일념원은 멀지 않아 성취될 것이고 이 땅위에는 부국강병의 새 역사가 창출될 것”이라 하였다는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⁴⁶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은 “50여 년 동안에 걸쳐 기록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과제들이 실현된 것은 민족사적 사변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대단결의 기운이 더 한층 높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의 불멸의 공적이라 하였다.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남한이 수용하였다고 하고,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공조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선전한다.

김정일은 사상이나 이념보다도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뜨거운 동포애와 크나큰 포용력으로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조선민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긍지 높은 민족”이라 선전하고 있다.⁴⁷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 밑에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을 실현하고,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가며 자주와 존엄,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한다.

4. 체제 위기의 극복

북한은 1990년대 초 소련과 동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개혁·개방으로 커다란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미·소 대결구도가 파괴되어 미국이 ‘힘의 논리’에 의한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되어 있다고 하고,⁴⁸ 사회주의 미래는 종말론과 희망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해체 등에 대해 커다란 위기를 인지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 새로운 이념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과 1990년대 중반에 기아상태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은 체제 해체의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⁴⁵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670호(2003년 11월 21일~11월 27일), p. 5.

⁴⁶ 『로동신문』, 2005년 5월 21일.

⁴⁷ 리철준, “민족대단결을 위한 탁월한 령도,” 『로동신문』, 2004년 11월 1일.

⁴⁸ 김봉호, 『위대한 선군시대』 (평양: 평양출판사, 2004), pp. 2~3.

특히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체제 비판과 저항 등 반김정일 사건이 발생하였다. 반 김정일 사건은 1995년 초에 자강도 강계에 있는 군사대학원생 200여명이 김정일 암살을 목표로 비밀조직을 결성한 사건 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다.⁴⁹ 그리고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당·정·군 간부는 물론 일반주민들도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김정일 때문에 인민경제가 파탄되었다고 인식하고, 김일성 부자를 비판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⁵⁰ 한편 북한은 배급제가 붕괴되고 암시장이 양성화되고 임금노동제가 도입되고, 종합시장제도로 변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물질중시, 자력갱생, 적극적 노동의식, 개인주의 성향, 이중적 행위양식, 현상탈출 심리, 범죄 및 일탈 행위 증가 등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⁵¹

2004년에만 해도 4월 초 장성택의 숙청,⁵² 4월 22일 용천역 폭발 사고, 9월에 김정일의 처 고영희 사망에 따른 후계 권력 암투설, 김정일을 비방하는 전단지과 김정일 얼굴에 스프레이 페인트 사진과 포스터 발견 등이 있었다. 북한의 3개 도시에 반 김정일 포스터가 공공장소에 부착되고 휴대전화를 통해 내부 동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 권력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⁵³ 외부로 편지를 보내거나 국제전화를 할 수 없고, 감시를 받으며 외국인과 말을 하는 북한 체제에서 휴대전화가 반정부 활동의 무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려고 2004년 5월 말에는 각급 기관과 개인이 소지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기도 하였다. 2004년 11월에 김정일 초상화에 김정일은 독재자이고 축출할 것이라는 반체제 격문이 발견되었고,⁵⁴ 북한의 호텔 등 공공장소에 있던 김정일 초상화를 군부가 철거를 지시하여 철거되었으며 ‘경애하는 지도자’ 호칭 생략 사건 등이 있었다.⁵⁵

⁴⁹ 북한의 반김정일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오기완, “반김정일 세력 대두 징후,” 『북한』 (2004. 11), pp. 58~64.

⁵⁰ 북한에서 정치적·사회적 기강의 해이와 반 김정일에 관한 사례들은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141~147.

⁵¹ 전현준, “북한상황과 통일전망,” 『신규위원 연수 특강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4. 23) <www.acdpu.go.kr>.

⁵² 장성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서 로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실질적 제2위 권력자로서 김정일이 이변이 발생하면 권력을 잡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조갑제, “권력기반 흔들리는 김정일 체제,” 『북한』 (2004. 11), pp. 55~56.

⁵³ *New York Times*, 22. November, 2004.

⁵⁴ 김정일 초상화에 “김정일 너는 누구냐, 너는 독재자다. 인민은 너를 용서 안할 것이며 정권의 자리에서 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다. 개혁 개방만이 살길이다.”라 쓰기도 하고, 반체제 격문이 발견되었다. www.dailynk.com의 보도 내용, 『중앙일보』, 2004년 1월 18일.

⁵⁵ 김정일 초상화 철거와 호칭 생략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한데, ①북한 정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징후로서 군부세력이 김정일에 대한 불만의 표시, ②권력이양

이러한 북한에 대해 체제유지를 하지 못하고 혼란 상태에서 분할 내지 공중분해 되는 해체국가(failed nation)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⁵⁶ 이러한 북한의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남한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남한으로부터 더 많은 대북 지원을 얻어 식량난과 경제난 등의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개발을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민족공조는 수세적인 차원에서 북한이 경제난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각종 남북 교류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여 왔다.⁵⁷

한편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공조를 주장한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도 무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에 의한 전쟁위협과 핵전쟁은 북만이 아니라 남에도 꼭 같은 위협의 재난이 된다고 한다.⁵⁸ 미국이 북한을 핵문제에 압박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 극도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남한의 협력을 얻어 극복하려고 민족공조를 주장한다.

V. 민족공조의 평가

남한과 북한이 추구해 온 민족공조는 목적과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남한의 민족공조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위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 데 비하여, 북한의 민족공조는 기존의 대남 선전과 선동적 전략의 변형으로 반미운동과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여 남한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남북한이 전개한 민족공조의 성과를 보면, 첫째,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강산 관광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개성공단 개발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남남갈

의 신호, ③김정일의 건강 이상에 따른 북한 내 권력 승계 준비, ④김정일이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비판을 완화하고 신격화된 자신의 이미지가 미국의 공작에 의해 퇴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자신의 격을 낮추고 있는 것 등이라 분석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2004년 11월 22일.

⁵⁶ 이기택, “북한은 해체국가로 진입하는가?,” 『북한』 (2004. 10), pp. 46~52.

⁵⁷ 이수석, “김정일 정권 2기 출범과 북한의 정책 전망,” 『북한』 (2003. 10), p. 55.

⁵⁸ 림룡철, “미국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나가자,” 『로동신문』, 2004년 10월 30일.

등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심각한 이념대립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진보집단에서는 북한이 양적·질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하고 근본적 변화로 진전될 것이라 평가한다.⁵⁹ 야당과 보수집단은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의 변화도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는 일시적인 것으로 본질적 변화가 아니라는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진보적 정책에 대해 보수적 관점에서의 비판이 이념적 대립으로 전개되고, 이는 친북과 반북, 친미와 반미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지원으로 커다란 경제적 실리를 얻었으며, 남한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반미운동과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으로 인한 한미동맹의 약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 지식인 중 일부가 북한측 주장에 상당수 공감하고 있으며,⁶⁰ 친북과 반미적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립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고,⁶¹ 동족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민족공조와는 달리 대남불신과 선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조평통 서기국 명의로 ‘참여정부 2년의 반통일 행적 결산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결산서에서 참여정부는 집권 초에 6·15 공동선언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지난 2년간 이와 반대되게 행동해 왔다고 비난하면서 사죄를 요구하였다.⁶²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민족공조와는 달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선전의 이중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한의 민족공조적인 대북정책과 북한의 민족공조 전략은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남한이 민족공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이 증가하면서 북한 지도층과 인민들의 대남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⁵⁹ 통일부, 『최근 북한 변화동향』 (서울: 통일부, 2004), p. 13.

⁶⁰ 남시욱,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족과 반미의 함수,” 『북한』 (2004. 1), p. 35.

⁶¹ 한국갤럽이 신세대(16~25세)의 민족주의에 관한 조사에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편들겠다는 의견이 66%나 되고 있어 탈이념, 실용적 민족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5년 6월 24일.

⁶² 참여정부 2년의 반통일 행적은 ①대북송금특검으로 6·15 민족사적 의의 훼손, ②민간 추모단의 김일성 10주기 방문 불허, ③집단유인 납치행위 감행, ④미국과 합동군사연습 강행, ⑤비상대비계획 갱신 및 체제붕괴 추구, ⑥인터넷 친북사이트 차단, ⑦핵무기 개발 비밀리 추진, ⑧이라크 추가파병 강행, ⑨보안법 철폐관련 애매모호한 태도 견지, ⑩남북관계 악화책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등이라 하였다. 『평양방송』, 2004년 12월 28일.

북한지도층이 남한을 적대적 체제로 인식하고 북한체제가 우월하다고 선전하였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대남 인식이 크게 변한 결과이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극복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남한과 적대적 관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북한 지도층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대상으로 전제된 남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는 것은 남한의 경제력과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북측 대표단의 국립현충원 참배, 국회 방문 등 이념적·정치적으로 금기시되었던 분야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적개심이 약화되는 등 대남 인식이 변화되었다.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들은 ‘고난의 행군’ 시절에 김정일이 인민들의 아사 상태를 방치하였는데, 남한의 식량 지원과 각종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기아문제를 해결하여 준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남한에서의 각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⁶³ 남한이 북한에 대한 식량과 비료 지원이 북한 가정에 전달되어 남한의 경제력을 인식하게 되었고, 남한을 동경하여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민족공조는 북핵문제가 미해결의 상태에 있지만,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평화 정착의 가능성을 진전시켰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6자 회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한 것도 민족공조의 성과이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사례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제15, 16차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한 것 등은 남북대화의 유용성을 입증한 것이다. 휴전선을 통과하는 금강산 육로 관광,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을 철수한 것 등은 군사적 대결을 완화한 것이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하여 군사분계선의 선전물 제거, 서해통신소 연락소 설치,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치 등의 합의도 성과이다.

다섯째, 남북한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수산, 농업, 해운 협력 등 남북협력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 대화 태도가 기존의 정치선전을 하거나 논쟁에서 실질적 협의를 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남북한 교류와 협력 사업의 증대되어 인적 교류와 교역량이 2001년부터 급증하고 있고,⁶⁴ 남북협력과 지원이 식량과 비료 등에서 보건, 의료, 방역, 농업, 수산, 과학기

⁶³ 2004년 10월과 2005년 9월에 새터민들과의 면담 결과임.

술, 경공업 등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으로 2005년 11월 현재 5,400여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00개의 공장에 북한 근로자 수가 십만 명으로 늘고, 남한 근로자 1만 5,000명이 같이 근무할 것이라 하고,⁶⁵ 남북경협협회사무소가 설치되어 남한 정부기관이 북한 지역에 상주하여 북한 당국과 공동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의 확대는 북한의 대남인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대남의존도를 증대하게 될 것이다.

고구려 관련 대북 문화재 보존 사업, 역사의 남북한 공동연구, 독도 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고구려 유물 전시,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유해 송환 추진, 을사5조약의 원천무효 확인 등 역사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민족공조의 성과라 할 수 있다.

VI. 결론: 민족공조에의 대응

남북한이 추구해 온 민족공조에서 부정적 측면은 개선하고 북한 내부의 긍정적 변화 측면과 실제적인 성과는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대북 정책은 첫째, 북한에 관한 남한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고,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대북지원의 확대로 야기되는 국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친북과 반북, 반미와 친미 등의 갈등과 안보 불안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대북 및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야당과 보수집단의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진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대북정책을 독점하는 태도에서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과 보수집단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하겠다.⁶⁶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지원과 협력에 의한 재정 문제,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 그리고 지극히 편향된 친북 및 반미적 주장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겠다.

⁶⁴ 남북한 인적 교류를 보면 2001년에 8,742명, 2002년 13,877명, 2003년 16,303명, 2004년 26,534명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2005년에는 10월 현재 71,675명이나 되고 있다. 남북교역 규모는 2001년 4억 달러, 2002년 6.4억 달러, 2003년 7.2억 달러, 2004년 6.9억 달러이었는데, 2005년에는 10월 현재 8.8억 달러나 되고 있다.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서울: 통일부, 2005. 11. 22), p. 5.

⁶⁵ 정동영, “미래로 가는 길-지난 55년의 역사와 남북관계,” 『코리아타임스』, 2005년 11월 11일.

⁶⁶ 제성호,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큰 정치 기대,” 『북한』 (2004. 5), p. 98.

둘째,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대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의 실제적 이행을 요구해야 하겠다. 북한은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민족공조를 주장하는데,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공조의 실행을 요구해야 하겠다. 북한이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남한을 비난하고 심지어 내정 간섭을 하고, 대남 선동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상태에서는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북 지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선전적인 민족공조가 아니라 실제적인 공조를 하여야, 남한의 대북지원과 교류 협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북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셋째, 평화번영정책의 일차적 목표인 북핵 문제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주장을 들어 해결을 시도해야 하겠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대한 군사도발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압박전략과 같은 강경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⁶⁸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북 전력 지원 등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겠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었지만,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과 북한 간의 해석이 다르고 실제적인 이행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구체적 합의와 이행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제적인 민족공조를 주장해야 하겠다. 북한이 합의한 핵 포기를 이행하여야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고 안전보장이 이행될 수 있고, 남한의 지원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넷째, 남북한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민족공조와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국제공조가 불가피하다. 우리의 대북 정책이 추구하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인 개혁과 개방이 남북한 간의 공조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공조와 연계는 불가피하다. 특히 북한은 경제문제는 남한과 협력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핵문제 등 군사안보문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⁶⁹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비추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에 대해 한미군사동맹을

⁶⁷ 김구섭·차두현,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p. 221.

⁶⁸ 전성훈,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의 선택,” 『국가전략』, 가을호 (2004), pp. 19~24.

⁶⁹ 최진욱,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북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p. 175.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대응해야 할 생존의 문제이고,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안을 추진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2004년 9월 28일 북한 인권법(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과 식량난, 탈북자의 보호 등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의 생존과 보호는 당면한 과제인데, 이들 문제도 미국과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 북한 지도층의 행태와는 달리 남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새로운 생활필수품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의 민족공조가 대북 지원의 확대와 대내외적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남북관계의 실제적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또한 북한의 민족공조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겠다.